

전주 선미촌 인권·기억의 공간 '변모'

1억3500만원 투입 폐공간 매입부지 시티가든 2개소 조성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 녹지와 휴식공간 등을 갖춘 시티가든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선미촌 폐공간 매입부지에 오는 4월까지 총 1억3500만원을 투입해 녹지와 휴식 공간 등을 갖춘 시티가든 2곳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티가든이 조성되면, 선미촌이 보다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기피하던 공간인 선미촌을 열린 시민공간으로 점진적으로 재생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시는 기린대로변 농협 옆 부지를 여성 인권이 유린된 공간인 선미촌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인권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선미촌 내 폐공간 매입부지는 성매매종사자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로 조성해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



서해 EEZ 바다모래 채취 규탄

15일 오후 군산시 비응항 수협 위판장 앞에서 군산수협어촌계협의회 어린이들이 정부의 EEZ 골재채취 연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지역 개발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와 선미촌 문화재생사업(34억원) 등 총 9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점진적 재생해나갈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선미촌의

영향으로 낙후되고 공동화된 서노송 동 일원 110,000㎡에는 행복주택이 건립되고,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및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아트팩토리과 아트레지던시 사업 등 다양한 문화재생 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버려지는 제품에 새 가치를 더해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센터를 선미촌 안에 건립하기 위해 국비 등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재활용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학교급식연대 “급식비 횡령 교장 임용 철회”

도교육청 절차상 문제 등 이유로 임용 반려 해당 학교 통보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학교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됐다 또 다시 복직된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A학원 이사회는 도덕적 양심이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며 “5년 전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급식비 4억6000만원을 착복해 파면된 교장을 다시 임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용제한 5년이 지나자 학부모와 시민들을 비롯이라도 하듯 임용을 결정했다”며 “교육과 양심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교법인이라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해당학원은 5년 전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

다”며 “학교 급식비 비리가 일어났던 것은 교육적 책임과 양심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학부모들의 활동을 학교는 강압과 무시로 일관했었다”면서 “학교 급식은 개선됐지만 떨어진 학교의 명예,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신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스로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학원 이사회는 당장 교장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임용을 철회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고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학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재로 사회재단의 오만한 결정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임용된 B 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약 2년간 학교 급식비 4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률상에 명시된 임용 제한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B 교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 등의 이유로 임용 반려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자연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아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꽃과 함께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주시 호동골 양묘장 일원에서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 양묘장의 꽃과 어우러진 자연 학습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전주시와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등 인근 시·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계절에 맞춰 피고 지는 꽃 이야기 △꽃인 물들인 손수건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아동 집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연을 가장 편안한 놀이터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 등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도내 한 종합병원 수술용 칼 넣고 봉합

60대 환자... 병원측 “수술비·입원비 일체 부담하겠다”

도내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수술용 칼 일부를 환자의 배속에 놓아둔 채 봉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환자 A(63)씨의 척추수술 도중 1cm 길이의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배속에 놔둔 상태에서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당시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칼날이 부러진 사실을 알았지만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봉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척추수술을 마치고 계속되는 복통을 호소하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칼날이 몸 속에 남

아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병원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지난 6일 A씨의 몸에 남아 있던 수술용 칼날 조각을 제거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라며 순순히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수술비와 입원비 일체를 병원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의료사고와 관련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환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불편을 겪은 환자에게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불법 선거 사범 대대적 단속 나서

전북경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오는 5월9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9대 대선이 촉박한 선거일정과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비방 및 협박,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편성된 수사전담반에는 195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며, 특히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

한 가짜뉴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32명의 전문 사이버수사요원도 포함된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규정하고 24시간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적발된 3대 선거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구속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선거사범과 자금책 등 배후세력 및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제도 홍보

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에 대한 홍보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각종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하고,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입 신고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독려를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시는 또, 원룸·다가구주택 단지 내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소유자 및 관리자, 거주자 등에게 제도를 알리고, 중년 경로당 등 10개 경로당을 찾아 상세주소제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부여해 택배와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도록 돕고, 각종 고지서를 전달 받지 못해 면허정지와 가산금 부과 등의 주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도입된 법정주소 제도이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